



#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국제적 대응

## - IPCC의 설치를 중심으로 -

범지구적 환경문제로서 거론되고 있는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구의 온난화, 오존층의 파괴, 열대림의 감소, 사막화, 해양오염, 산성비, 유해폐기물의 월경이동, 야생생물의 종의 감소 등을 들 수 있다. 이중 지구의 온난화문제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작년 11월에 WMO (세계기상기구)와 UNEP (유엔환경계획)에 의하여 설치된 것이 「지구 온난화문제에 관한 정부간 패널」 (International panel of climate change : IPCC)이다. 1990년 가을까지 지구온난화문제에 관한 국제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전세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작업반이다. 이제 이 기구의 세부적 내용을 소개하기 전에 지구온난화문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최근 동향을 보기로 하자.

1988년 6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미소수뇌회담에서는 널리 보도된 중거리 핵무기 삭감이라는 합의외에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양국간의 협조를 위한 결의표명이 있었다. 공동성명은

① 양수뇌는 오존층의 보호나 염려되는 지구의 온난화대책 등 쌍방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환경보호에 관해 세계의 기후·환경변화에 대한 협력확대를 목표로 한 워싱턴 수뇌회담후의 활동에

노용희 / 본지 편집위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교수

만족의 뜻을 표명했고

② 양수되는 지구상의 대지·해양·대기 등에 콜로지와 환경을 감시코져 하는 양국의 우주계획으로 가능해진 새로운 수단을 한층 더 활용할 뜻을 강조했으며

③ 양수되는 이 중요한 분야에서 양국간 또는 다국간의 협력을 앞으로도 계속 추진시킬 필요성을 강조하였다라고 밝히고 있다.

88년 6월 캐나다의 토론토에서 개최되었던 선진 7개국의 경제정상회의(토론토 서미트)에서도 지구환경문제가 각국 수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종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선언문 속에서 언급하고 있다.

① 지구적 규모의 기후변동, 대기오염, 해수 및 담수의 수질오염, 산성비, 산림감소, 절대위기에 처한 종의 문제를 거론할

② 지구규모의 기후변동에 관한 UNEP/WMO의 합동 정부간 패널(IPCC)의 설치 및 캐나다 정부 주최의 국제회의를 환영한다.

정상회담직후 토론토에서는 정부가 주최한 「변화하는 대기 : 세계의 안전을 위한 내용」이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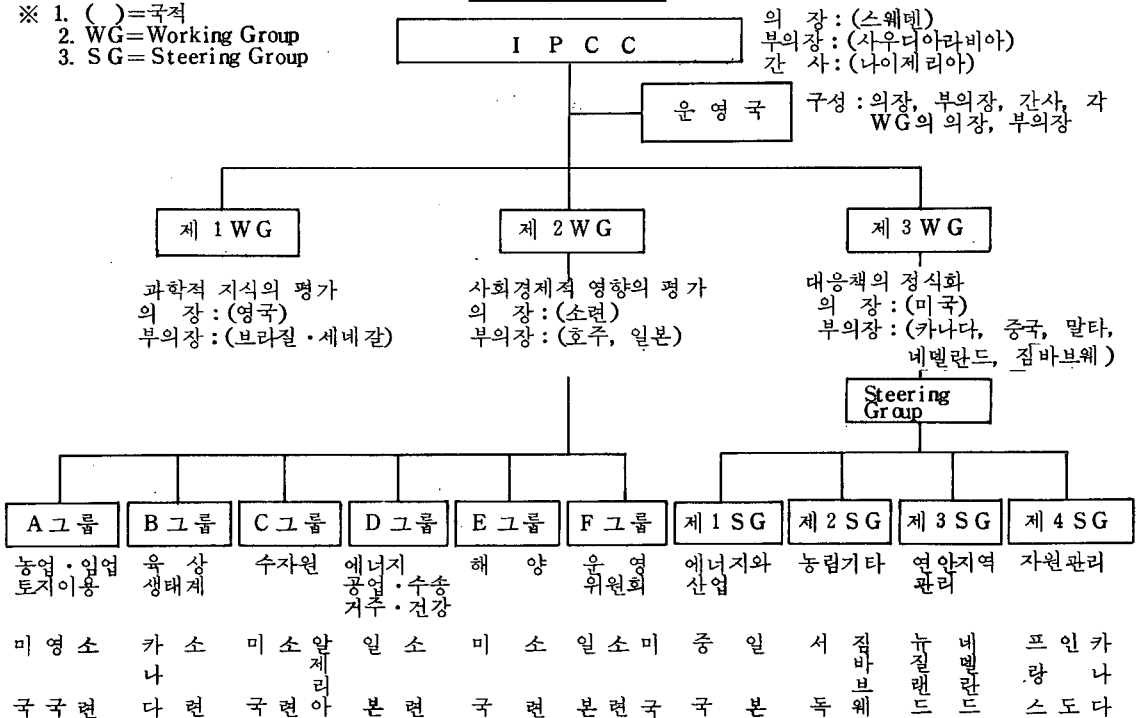
국제회의가 열렸다. 세계의 과학자, 정치가,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 회의에서 선진제국은 2005년까지 88년 실적보다도 CO<sub>2</sub> 배출량을 20% 삭감시켜야 한다는 선언안이 검토되고 뒤인 11월에 이 선언이 채택되었다.

88년 11월 서독 대통령이 후원하는 국제회의 「기후변동과 개발」이 함부르크에서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2000년까지는 현재보다 30%, 2015년까지는 현재보다 50% 탄산가스의 배출량을 삭감하자는 선언안이 제출되었다. 이 안은 지구온난화문제의 과학적 인과관계가 명확치 않다는 지적이 있어 채택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구체적인 동향을 배경으로 IPCC는 1988년 11월에 WMO와 UNEP에 의하여 슈네브에 설치되었다. IPCC는 지구온난화 문제에 관해서 현존 과학적 지식의 평가, 온난화가 가져오는 환경적,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평가 및 그 대응책의 검토를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서 서방 선진국은 물론 소·중·일 등 동중국가나 개도국가들까지 포함하는 30개국의 관계국제기관이 참가하고 있는데 그 기구는 표에서 보는 바와

### IPCC의 기구

- ※ 1. ( )=국적
- 2. WG=Working Group
- 3. SG=Steering Group



갈다. IPCC은 그 작업을 1990년 가을까지 끝낼 것을 목표로 정력적인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음은 아쉬운 일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네델란드와 말타가 제 3 WG의 부의장으로 되어 있음은 지구온난화에 의한 해수면상승으로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네델란드의 수상은 프랑스, 노르웨이의 수상들과 더불어 대기보전에 관한 새로운 지구적규모의 협력을 각국에 제기할 것을 목적으로 환경수뇌회의를 제창하여 금년 3월에 헤이그에서 국제회의를 가졌다. 24개국, EC회원국, 그리고 5개의 국제기구가 참가한 이 환경수뇌회의에는 미국, 중국, 소련이 초청되지 않았고, 애초 국제환경문제에 강력한 권한을 갖는 새로운 국제기관의 설립, 징벌의 원칙, 보상의 원칙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선언안이 마련되어 있는 등 제창국주도형 정치색이 강하다 하여 영국도 참석하지 않았다. 결국 선언안은

① 지구온난화대책에는 새롭고 또한 보다 효과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② 지구온난화대책의 실행을 위해 유효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강력한 기능을 만들 필요가 있으며

③ 이때 정보교환, 대책수단의 충실, 기준의 설정, 기준준수의 감시 등을 실시해야 하고

④ 지구적인 대책으로 특별부담금을 부과받은 개도국에 대해 그만큼의 원조를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이 필요하며

⑤ 이러한 대책의 실시를 위한 기본적인 조약을 검토해야 한다는 IPCC 활동과 동일 방향으로 낙찰되었다. 이러한 동향은 지구온난화 문제가 정치적 색채를 띠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고 하겠다.

금년 4월에는 「OECD/IEA 온실효과가스 배출저감기술에 관한 세미나」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IEA(국제에너지기관)와 공동주최로 지구온난화문제에 관한 세미나를 열었다는 것은 지구온난화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 에너지정책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주요 온실효과가스는 탄산가스이고**

**그 주요 발생원은 화석연료의 소비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즉효성있는 단일한 기술방법이란 있을수없다.

② 온실효과가스 저감을 위한 기술 옵션은 존재하지만 획일적으로 적용해서는 아니되고 각국의 사정, 에너지이용형태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③ 현재 이용가능한 저감방법으로 생각할수 있는 것은 성에너지와 자동차, 빌딩, 제조과정에서의 에너지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정도이다. 이밖에 화석연료의 고효율이용, 비화석연료 또는저탄소함유연료로의 전환, 바이오매스 이용의 확대, 산림의 재생노력, 수력, 원자력, 태양, 풍력에너지의 이용확대 등을 들 수 있다.

④ 2030년까지 이용가능한 에너지로서는 신형 원자로, 재생가능에너지와 선진적인 성에너지기술 등인데 이를 위해 보다 많은 연구기술 개발의 노력이 필요하다. 핵융합은 2030년 이후에나 실용가능하게 될 것이다.

⑤ 이밖에 CO<sub>2</sub>의 고정화음료이용기술, 인공 광합성기술에 대해 검토하고

⑥ 또한 비에너지분야에 기인한 CO<sub>2</sub> 이외의 온실효과가스에 대한 검토가 절실하고

⑦ 온실효과가스 저감을 위한 에너지관련기술에 대해 여러가지 형태로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지난 5월 핀란드의 헬싱키에서 세계 90개국 관련자를 포함 1백여개 환경단체들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핀란드정부와 UNEP가 공동주최로 오존층보호를 위한 몬트리올 의정서 가맹국 1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 금세기말까지 CFCs 생산을 금지할 것 등을 촉구하는 선언이 채택되고 내년 런던에서 후속회담을 개최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밖에 IEA, OECD, UNEP, WMO 등이 9월까지 각료이사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 7월에 열릴 파리 정상회의에서 지구온난화문제가 주요 의제의 하나로 채택될 것이 확실하고 9월에는 동경에서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세계회의」가 일본정부에 의하여 개최될 예정으로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러한 국제적 움직임에 정부나 민간단체의 적극적 가담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